

답보 '남해안 관광벨트' 속도낸다

김영록 지사, 10년째 지지부진 개발사업 진두지휘
문 대통령 지역공약·해양관광도로 예타 면제 호재

지난 10여년 간 제자리를 맴돈 남해안권 개발사업이 민선 7기 들어 결과물을 만들어 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핵심 시책으로 제시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고, 정부도 대통령 전남 지역공약으로 관련 사업 추진을 약속하는 등 남해안권 개발사업의 돌파구 마련이 주목된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민선 7기 1호 브랜드 시책인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적극 나서

고 있다.

이 사업은 남해안에 흩어져 있는 관광자원을 광역벨트로 묶어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다. 내년 부터 2029년까지 영광-목포-여수-부산 일대에 4조원을 투입해 해양관광도로와 섬·휴양 관광거점을 조성하게 된다.

김 지사는 이 사업의 본격화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한달간 일정으로 대상지 현장투어를 시작했다. 첫 일정으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과 '고하도 역사유적공원'을 점검했고, 앞으로 서

남해안 시군을 따라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사업' 대상지, 신안 압해-해남 화원 등 해양관광도로 단절구간, 목포-보성 남해안철도 사업구간 등을 돌아볼 계획이다.

현장투어를 통해 추진상황을 직접 챙기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사업을 구체화하고 가다듬는다는 복안이다.

김 지사가 1호 브랜드시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에 나서면서 지난 10여년 간 성과를 내지 못한 남해안권 개발사업의 가시적 결과물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남해안권 개발사업의 대표적 케이스는 이명박 정부의 '남해안 선벨트'가 꼽힌다. 지난 2009년 시작된 이 사업은 전남과 부산, 경남의 해안선에 연결한 35개 시군을 세계적 해양관광 및 경제·

물류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매듭을 짓지 못하고 흐지부지 됐다.

그동안의 남해안 발전 프로젝트들도 장기 비전과 지역별 경쟁력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전략 없이 지자체 희망사업을 취합한 백화점식 계획 수립이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관광객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 등 소프트웨어가 부족하고 관광·문화·산업 등 분야 간 단절과 인근 시군 간 연계 부족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뚜렷했다.

전남도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권역별 거점 등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2면으로 이어짐 /정근산 기자

'전남매일 CEO경제아카데미'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4강
국토부서 잔뼈 굵은 국토개발 정통 관료

알림 제1기 '전남매일 광주·전남CEO경제아카데미' 네 번째 강연이 오는 22일 라마다플라자호텔 4층 대연회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강사로는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과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입니다.

지난 1985년 행정고시에 합격, 건설부 근무를 시작으로 줄곧 건설교통 및 국토해양 분야에서 일해 온 박 사장은 지난 2016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역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박상우 사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낙점됐다가 낙마한 최정호 전 차관의 탈락으로 장관 후보로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입각 여부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관심과 감동을 주게 될 이번 강연에 원우들의 적극적인 참석 바랍니다.



- ▲일시: 2019년 4월22일(월요일) 오후 6시
- ▲장소: 라마다플라자호텔 4층 대연회장(상무지구)
- ▲강사: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 ▲강연 주제: '우리가 살아온 도시, 우리가 살아갈 도시'
- ▲문의 전화: 전남매일 관리국(062-720-1012)
- ※6시부터 17층 파라뷰 레스토랑서 저녁식사 후 7시 강의



5·18역사왜곡처벌광주운동본부가 18일 오전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에 대한 각 당의 공식 입장과 처리 시한, 추진 방법을 오는 22일까지 구체적으로 밝혀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여야,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입장 밝혀라"

5·18단체 "당리당략 떠나 역사적 결단 내려야"

'5·18 망언'을 계기로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5월 단체가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5·18역사왜곡처벌광주운동본부는 18일 오전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4당을 향해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에 대한 각 당의 공식 입장과 처리시한, 추진방법을 오는 22일까지 구체적으로 밝혀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은 전적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여야 4당의 의지 문제"라며 "4월 안에도 진전이 없다면 우리는 광주시민과

함께 더 큰 결단과 투쟁으로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는 이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 간 협상의 거름물이나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여야 4당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역사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찬 기자

한전공대 '지원 동의안' 나주시의회 통과

29일 실시협약...대학설립 '가속도' 붙여

나주시의회가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내용을 담은 동의안을 의결해 한전공대 설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나주시의회는 18일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한전공대 설립·운영에 따른 지원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애초 동의안에는 한전공대 대학발전기금을 10년간 매년 100억원씩 총 1,000억원과 매입비 662억원에 달하는 연구소와 클러스터 부지 80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클러스터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전제 부담액을 대학발전기금 1,000억원과 연구소 부지매입비 331억원 등 총 1,331억원으로 수정했다.

앞서 지난 11일 전남도의회가 '한전공대 설립 운영에 따른 지원 동의안'을 처리한 데 이어 이날 나주시의회도 동의안을 수정 의결함에 따라 한전공대 설립 절차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과 전남도, 나주시는 한전공대 재정지원을 위한 실시협약 시기를 조율

중인데, 오는 29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서에는 재정 지원과 부지 제공, 인재양성·인프라 구축 등의 이행사항이 담겼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한전공대 발전기금으로 대학이 개교하는 2022년부터 10년간 각각 매년 100억원씩 총 2,000억원을 지원해 산학연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과 국내외 우수학생 유치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전공대 부지 40만㎡는 ㈜부영주택이 한전공대 학교법인에 무상 제공하고, 연구소와 클러스터 부지 80만㎡는 시기·방법 등에 대해 한전과 협의하고 있다.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오는 6월 한전공대 설립 관련 기본계획 확정, 9월 학교법인 설립, 2020년 2월 도시계획변경, 6월 캠퍼스 건축허가 및 착공, 2021년 6월 대학설립인가, 2월 캠퍼스 준공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3월 개교하게 된다. /나주=이재순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518run.com

5·18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

제19회 5·18 마라톤대회

일시 2019. 5. 11 (토) 집결 08:00 / 출발 08:50

장소 광주상무시민공원(운동장)

종목및참가비 5.18km, 5.18km빛코스 10,000원 / 10km, 하프코스, 30km 30,000원

접수기간 ~ 2019년 4월 19일(금) ★현재접수중★

접수방법 전화, 팩스, www.518run.com / 0518run@hanmail.net

문의 TEL (062) 720-1099, FAX (062) 720-1020

카카오톡 문의 ID : jndnnews

※ 식전행사에 참가자와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 합니다.

주최 518 기념재단

주관 JM 스포츠

후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국가보훈처

광주은행

보광종합건설(주)

골드종합건설(주)